

무책임한 보도가 만든 또 다른 인권 침해

—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무죄 판결 받아 —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형과 무죄 양 극단을 오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검찰은 그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혐의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살인과 존속살인 등’이라고 했다. 2009년 9월 검찰의 일방적 수사결과에 따른 ‘무리한 기소’ 논란에 대해 언론은 ‘범인인 양’ ‘진실 인양’ 왜곡하고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사건 후 6개월이 지난 2010년 2월말 1심 법원은 이들 부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법적 심판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을 오갔다.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지만 남은 것은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살인마’, ‘엽기적 살해 공모자’로 낙인찍힌 이들 부녀가 갈 곳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죽일 년 놈들’이라며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과 ‘무고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온건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무죄’라는 법의 판결이 여론재판으로 낙인찍힌 ‘범인’이라는 소문을 제거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미약했다. 무죄판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미미했다.

아내를 딸과 함께 공모해서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쓴 A씨(60. 전남 순천시)와 검찰로부터 ‘지능범’으로 지목된 ‘정신이 좀 모자란다’는 A씨의 딸 B씨(27)는 무죄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고향집은 텅 빈지 오래됐고 마을 민심은 여전히 흉흉했다. 검찰에 의해 살인마가 된 부녀는 언론의 집중 보도로 완전히 살해공모자들이 됐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들은 ‘마을을 망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마을사람들의 분노 때문에 경찰의 체지, 보호가 어려울 정도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했고 그들의 집앞에 침을 뱉었다. 초라한 집은 폐가가 됐고 인적은 자취를 감추었다.

졸지에 아내를 잃은 피해자에서 검찰수사로 어느 날 가해자로 바뀐 A씨는 석방된

후, 심신이 피폐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석방된 딸은 언니네 집을 임시 거처로 삼아 숨어버렸다. 무죄 판결을 받고도 성난 민심이 두려워 고향 마을, 집으로도 가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마을은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무고한 피해자만 남은 이번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이미 세인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

언론의 무모한 보도, 인권침해식 제목달기와 무분별한 취재,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발표를 사실로 단정하는 보도,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행복추구권이 무참하게 무너진 현실, 오보에 대한 정정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정기능을 상실한 언론의 보도관행... 모든 것은 문제투성이로 남았지만 바쁜 하루의 현실은 이런 분명한 문제점을 잊혀진 과거로 만들어버리고 언제 또 다시 제2, 제3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게 될지 모를 일이다.

모두가 잊어도 좋다. 모두가 다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이들의 수사내용과 결과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하는 언론기관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발전은 반성을 전제로 한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엽기적 사건으로 돌변

2009년 7월초, 전남 순천에서 누군가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술을 마시고 2명이 숨지고 2명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처음에 그저 그렇게 알려졌다. 대부분 언론은 무시하거나 비교적 작게 또한 중립적으로 다뤘다.

당시 보도제목들 보면 단순 사건을 중립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쳤다. 전혀 인권침해 소지가 없었다. ‘순천서 독극물 든 막걸리 마신 4명 사상’ (조선일보 2009년 7월 7일자), ‘독극물 막걸리 2명 사망, 2명 중태’ (중앙일보 2009년 7월 7일자), ‘독극물 막걸리 마신 여성 2명 사망’ (한겨레 2009년 7월 7일자)...

그러나 이 사건이 2009년 9월 14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소하자 보도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던 언론은 검찰의 발표를 진실인 양 모든 것을 단정하는 편향된 자세로 바뀌었다. 내용은 엽기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했지만 검찰의 발표라는 관행 앞에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는 개선되지 못했다. 제목은 마치 매체간 선정성을 경쟁하는 듯 주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 부적절한 관계가 발단” (문화일보 2009년 9월 14일자), “근친상간 숨기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세계일보 2009년 9월 14일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불륜 숨기려 범행” (아시아 경제 2009년 9월 14일자) ...

인용부호를 달았지만 검찰의 발표란 내용이 제목에조차 없다.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사건은 엽기적으로 확대돼 전국을 뒤흔들었다.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감추기

위해 아내를,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소설에서도 보기 힘든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됐다. 검찰의 발표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제목으로 내세운 곳도 있었지만 내용상 별 차이는 없었다.

“檢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간 부적절한 관계 때문’”(경향신문 2009년 9월 14일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남편 살인혐의 부녀기소”(조선일보 2009년 9월 15일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부적절한 관계 부녀 공모”(연합뉴스 2009년 9월 14일자)...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기초로 이를 전달하는 보도기사였지만 이런 보도는 엄청난 전파력을 타고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여기에 좀 더 과장해서 엽기적인 내용을 더욱 엽기적으로 확대, 확산시키는 일을 일부 언론은 무책임하게 해나갔다.

심지어 “15년 성관계 부녀, 짜고서 어머니에게 청산가리를”(헤럴드 2009년 9월 14일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범인은 남편과 딸”(조은뉴스 2009년 9월 14일자) 등으로 범인을 단정했다. 차마 보도하기조차 민망하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언론은 검찰의 발표를 나팔수처럼 떠들어댔다. 민간뉴스 통신사 ‘뉴시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용하며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매우 치밀”(뉴시스 2009년 9월 14일자)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두둔했다. 여기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수사 검사들”(뉴시스 2009년 9월 14일자)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대단한 업적을 낸 것처럼 소개했다.

내용이 엽기적이고 기상천외할수록 검찰의 발표내용이나 수사과정을 검증하고 확인해야

내용이 엽기적이고 기상천외할 경우, 저널리즘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보도하라고 주문한다. 심지어 검찰의 발표를 ‘진실인 양 보도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오히려 검찰의 발표내용이나 수사과정의 치밀함, 논리성, 물증 등의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27세 딸과 15년간 ‘성관계’를 가졌다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검증조차 하지 않다니... 12살 어린 나이의 딸과 15년간 이런 행태가 장기간 지속됐다면, 다른 가족들은 왜 몰랐을까 하는 최소한의 물음조차도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지 최소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한국 언론의 용감성, 무모함, 상업성은 이런 저널리즘의 기본은 간단하게 무시한다. 언론보도의 피해자인 이들이 인권침해, 명예훼손으로 법적소송을 한다면 언

론이 이기기 어려울 텐데도 힘없는 사람들은 막강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는 구조와 관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행히 2009년 10월에 와서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검찰 수사상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를 계기로 보도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2차공판이 열린 2009년 10월 15일 이후 언론에서는 “자백뿐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법정 공방” 등으로 중립적으로 보도하거나 더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관련 기사들이 저널리즘상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도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필자는 2009년 12월 4일 언론정보학회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청산가리 막걸리 보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언론의 보도는 문제투성이었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기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론학자들조차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부분 언론 /심 무죄판결 결과 제대로 다루지 않아

캐나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소식으로 국민이 흥분하고 있는 사이 2010년 2월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각각 살인과 존속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A씨의 딸 B씨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극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문제는 논란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검찰에서 기소할 때처럼 크게 보도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2단으로 간단하게 판결결과를 보도했다. 다른 언론은 아예 무시하거나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그나마 조선일보에서 무죄판결 내용과 사건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보도하는 정도였다. 어느 언론도 과거 보도의 무모함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정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언론사, 명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회라면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들이 설혹 자기권리 찾기에 철저하지 못한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언론은 자발적으로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물론 아직 1심 재판 결과일 뿐 최종심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국민 사이에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모두가 이 사건을 잊어도 검찰과 언론은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2심,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때 가서 결과를 보고 판단, 보도하면 된다.

1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이전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개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해 주자. 무죄로

풀려난 아버지와 딸은 이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언론의 무자비한 보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짐승 같은 인간’이라며 돌팔매질을 받았을 정도였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유, 무죄가 결론난다면 이것은 법치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1심판결을 보면 문체의 아버지와 딸은 사랑했던 아내, 어머니를 줄지에 잃은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 의해 극형에 처해야 할 살해공모자가 됐고 언론은 이를 덩달아 과장, 확대보도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누가 언론에 그런 초법적 권한을 주었는가. 약자의 가슴에 두 번 세 번 못질을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부당함을 알고도 말리기는커녕 ‘잘 한다’고 더욱 요란한 복소리를 울리는 행태는 공동정범의 죄를 구성한다. 설혹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기소내용을 진실인 양 대서특필하는 관행 다양해야

언론에 세 가지만 요구하고 싶다. 첫 번째, 제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진실인 양 대서특필하는 관행을 바꾸라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사건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09년 새롭게 정비하여 인권침해요소를 배제하려 노력하겠다고 한다. 이런 노력이 모든 언론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기소내용은 일종의 주장일 뿐이다.

두 번째, 검찰발표를 법원 판결의 우위에 두는 보도관행을 지양하라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내용이 중요하다면 법원의 판결은 이에 못지않거나 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언론이 보도하는 비중이나 내용을 보면 법원 판결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비해 무시되거나 하위로 취급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지만 많은 오류가 이런 관행에서 빚어지는 만큼 언론의 각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언론은 여전히 인권에 대한 인식,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법에 앞서 여론재판으로 한 개인이나 가족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초법적 권리를 언론은 별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 언론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언론은 책임을 져야 한다. 보도가 잘못됐을 경우 비록 피해자들의 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정정 혹은 사과 보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정 보도를 받아내고 싶겠지만 그들의 입장이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 이들

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보도태도가 아쉽다.

인권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기본자세를 되돌아보는 계기 되어야

과거와 달리 2010년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지역의 작은 뉴스도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뉴스와 중앙뉴스가 따로 없다. 정보와 통신의 융합, 늘어난 매체 수, 강화된 네트워크, 심화된 경쟁 구조 등 이런 것들로 인해 지역의 작은 뉴스조차 엽기적이고 눈길을 끌 만한 상업적 조건을 갖출 경우, 진위 여부를 떠나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미디어 공룡’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포털의 기능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산,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규제와 억제 장치는 미미하거나 여전히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순천의 한 부녀가 피해자로 전락했지만 내일은 서울의 김 씨 가족이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검찰의 일방적 수사결과 발표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가해자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권리구제를 해야 할지도 모호하다. 국가가 이를 예방하고 개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챙기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 같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기본자세를 되돌아보고 선진사회에서 소중한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반성과 다짐의 계기가 돼야 한다. 잘못된 행태에서 교훈을 얻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타율적 강제수단이 동원되는 불행한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